

월요광장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이란발 ‘K-콘텐츠 중동 붐’을 기대하며

한 시대는 경제와 산업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 콘텐츠 부문에 대한 기대도 이에 못지않다. 사실 이번 대통령의 방문 기간 중 이란인들이 가장 관심을 표명한 분야는 ‘문화 외교’ 부문이었다. 이달 2일(현지시간) 테헤란 밀라드타워 콘서트홀에서 열린 ‘한·이란 문화 공감 공연’에는 1600여 명의 관람객이 자리를 가득 채웠으며, 인터넷 티켓 발매 이틀 만에 매진이 될 정도였다.

이 행사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이란의 구전 서사시 ‘쿠시나메’에 나오는 7세기 중엽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해 현지 관객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같은 날 테헤란 시내 밀라드 타워 시네마홀에서 개최된 ‘K-드라마 상영회’는 이란 방송 관계자, 한류 팬 등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란과 우리나라는 1962년 수교를 맺은 이후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해 왔다. 1977년에는 두 나라의 수도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서울 강남의 ‘삼릉로’를 ‘테헤란로’로 바꿨고 이란에는 ‘서울로’가만 들어지기도 했다. 1973년 오일 쇼크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중동 산유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석유를 공급한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다.

이란은 중동 국가 중 한국 문화에 가장 우호적이고 친근한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의 국기인 ‘태극도’를 수련하는 인구가 200만 명이 넘고, 경제 제재 이전에 수출된 우리 TV드라마 ‘대장금’과 ‘주몽’ 등이 80~90%란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얻기도 했다. 최근에는 드라마 이외에 K-Pop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은 콘텐츠 시장에 있어서도 대외 개방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강력한 이슬람 종교 교리와 규율이 국경 운영 전반은 물론 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종교 중심 국가다. 콘텐츠 산업에서도 이에 따른 강한 규제와 검열이 시장을 협소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예를 들면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신체 노출을 할 수 없는 이란의 문화 환경 속에서 우리 걸그룹이 공연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는 최근 인터넷 인프리가 확대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내수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올해 이란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8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우리 정부는 이란과 문화창조산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2017년을 ‘한-이란 교류의 해’로 정하고 중동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이어 두 번째로 이란에 한국문화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란 한국문화원은 한국 우수 문화상품과 다양한 콘텐츠를 이란에 소개하고 양국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국은 테헤란에 K타워, 서울에 I타워를 설치해 문화 및 비즈니스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제 제재 해제 이후 성장 잠재력이 높아진 이란 콘텐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이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 이란 신 한류 콘텐츠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올 초 아랍에미리트연합 한국문화원에 콘텐츠 마케팅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이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 진출 방안’이란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란에서 콘텐츠 신항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페르시아는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의 문화와 지식이 교류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대통령의 성공적인 순방을 계기로 다시 활짝 열린 이란을 한류와 문화 콘텐츠 산업 중동 진출의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콘텐츠 업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법조칼럼



이건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할 때

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처벌적 배상제도가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변론주의라는 대원칙 하에 대신적 구조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법원에 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정도를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입은 손해가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기업이 제조한 제품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보다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다소 완화된다.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을 통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그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입은 손해가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피해자가 이러한 요건들을 입증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로 인해 가해기업이 입게 될 경영상의 위험은 크지 않다는 데 있다. 가해기업이 배상해 주어야 할 금액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 그 중에서도 입증

이 가능한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위험성이 존재하는 제품이라도 일단은 시판을 강행할 것이다. 현재의 제도하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통해 기업이 얻은 수익에 비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고민할 때다.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한 영리활동은 결국 기업의 존폐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는다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는 결국 불운한 개인의 문제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고, 기업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또 다른 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기 고



박창명 법무청장

## 입영장을 축제마당으로 만든 ‘입영문화제’

하지만 본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무였기 때문에 고위층은 병역을 회피하고 그 의무를 하층민이 떠맡는 폐단이 일찌감치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의 사회는 병역의무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대, 예외없는 병역, 보다 공정하고 공평할 수 있는 병역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 병무청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간담회,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없는 병역이행을 위해 신체검사 강화와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감시, 예방하고 있다.

병역이행의 공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7%가 병역이행이 ‘자랑스럽다’고 대답한 반면 33%는 ‘자랑스럽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답변하였다. 자랑스럽지 않은 이유는 병역이행에 대한 개인적인 자부심은 높으나 국가의 보상과 사회의 존경심이 낮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병역이행은 당연하게 해야만 하는 것, 국가를 위한 개인의 소중한 희생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도부터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발굴하여 병역명문가 인증서와 명문가증을 수여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병역명문가문을 영구 게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3431가문이 선정되어 포상을 받았으며, 올해도 506가문이 선정돼 오는 5월27일 명문가증 수여식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28만여명이 군대에 입대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 입영대상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입장에서 병역이행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현역병 입영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제고하기 위해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추진해 올해 5년차로 새로운 입영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대 내의 시설, 전시된 보급품을 둘러보며 부모는 과거의 군생활을 추억하기도 하고, 한동안 못 보게 될 아들·친구·연인과 청춘의 한 때를 사진

으로 남기는 ‘축식 사진 코너’,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지만 표현에 서툴러 다 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에 담아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편지 쓰기’, 건강하게 키워 주신 부모님의 노고에 순간이나마 보답하는 ‘부모님 업고 걷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개방된 군부대 내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입영대상자와 가족들은 활짝 웃으면서 축제에 참여하듯이 즐겁게 입영문화제에 참여하고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과 같이 이제 병역은 피할 수 없는 젊은 청춘들의 통과례이자 사회와의 단절이 아닌 더 나은 인생의 무대로 나가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병역은 튼튼한 국가안보의 필수조건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이다. 우리 사회도 병역의무가 피하고 싶은 부담이 아니라 보람과 긍지가 되어 가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병역을 마친 사람, 앞으로 병역을 이행할 사람 모두가 존경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社說

## 지방권력의 도덕적 해이와 탈법 여전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지방 권력’의 일탈과 탈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을 부인의 운전기사 겸 수행원으로 동원한 자치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부정차우반 과태료 가산금을 감액받은 지방의원도 있다.

나주시는 최근 강인규 시장 부인에 대한 지나친 의전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나주시 사회복지과 여직원 2명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강 시장의 부인 수행을 맡았다고 한다. 나주시는 ‘시장 부인이 특별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행위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수십 건에 이르는 부정차우반 과태료 가산금을 감액받거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물의를 빚은 구의원도 있다. 광주 북구의회 A의원(61)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6년간 자신에게 부과된 22건의 부정차우반 과태료의 가산금 29만9000원을 감액받았다.

A의원은 최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북구가 압류 통보를 하자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만 납부했다고 한다. 북구는 “A의원이 그동안 부정차우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 통상적인 감액 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는 해명이다. 230통의 통지서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거나 구의원이 22건의 부정차우반을 했다는 것도 큰 문제다. 한편 광주 광산경찰도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장이 접수된 광산구의회 B(63)의원을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지방자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여 년이 됐지만 지방의원의 비리와 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권력의 ‘음습한 비리’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 지역사회의 자정 시스템 작동 강화와 사법부의 강력한 대처가 절실하다.

## ‘콩나물 운동장’ 아이들은 마음껏 뛰고 싶다

광주 지역 일부 신설 초등학교 운동장이 비좁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일부 학교의 경우 전교생이 참가하는 운동회도 학년별로 나눠서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산정초등학교에서 2주제 운동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전교생이 참여하는 운동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운동회뿐만 아니라 전체 조 회도 하기 어렵다. 북구 신용동 신용초, 광산구 흑석동 새별초, 수안동 수안초도 같은 고충을 겪고 있다.

이들 학교는 최근 5년 새 신중 주택가에 들어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택지 개발 사업자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아파트 부지를 늘리는 데만 신경을 쓴 나머지 운동장은 규정 내에서 흉내만 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돈벌이에 급급한 업자들이 ‘콩나물 운동장’을 만든 셈이다.

현행 규정은 초등학교 학생 수를 기준으로 600명까지는 3000㎡의 운동장만

확보하면 된다. 601~1800명은 기본 1800㎡의 면적에 학생 1인당 2㎡를 추가하며 실내 체육관을 만들 경우 바닥면적의 2배를 운동장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신설 학교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은 채 1평(3.3㎡)도 안 되는 형편이다. 여기에다 다목적 교실과 강당, 급식 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까지 갖춰야 해 운동장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코딱지만 한 운동장이 불려올 부작용은 생각보다 많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면 체력 저하는 물론 인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부모 등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차질을 빚는다.

이미 지어진 학교는 별도 예산을 책정해 최대한 단체 활동 장소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생 학교의 경우 적어도 전교생이 함께 운동회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7080세대라면 ‘일본 제품 안 쓰기’나 ‘국산품 애용하기’ 운동을 기억할 것이다. 8090세대는 대학 시절 미제 커피·콜라 안 마시기 운동을 아직 잊지 않았을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불매운동이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이후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불매운동이 있었지만 효과를 거둔 적은 없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옥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매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불매운동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거부 행위를 말한다.

불매운동

불매운동은 영어로 ‘보이콧’(Boycott)이라 하는데, 이 단어는 애초 사람 이름에서 비롯됐다. 1873년 아일랜드 메이오 주 백작의 영지 관리 책임자인 군인 출신 ‘찰스 커닝햄 보이콧’에서 따온 것이다. 흥작으로 소작농들이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자 보이콧은 그들을 쫓아내려 한다. 이에 소작농들이 소작료를 내리지 않는 곳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그 첫째 대상이 보이콧이었다. 결국 1년 뒤 보이콧이 오히려 아일랜드를 떠나야 했다.

가장 유명한 보이콧은 흑인 인권운동사의 큰 획을 그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이다. 1955년 12월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사는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시내버스 백인 좌석에 앉았다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흑백 분리를 규정한 몽고메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그의 체포 이후, 흑인들은 집단 파업과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전개했다. 여기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등이 나서고, 이수와

되면서 1년 뒤 대법원에서 시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일본의 ‘유기치루시 유업’이라는 회사는 1955년 자사 우유를 먹은 900여 명의 초등생들이 식중독에 걸리자, 즉각 사고와 함께 우유 전량 회수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2000년 집단 식중독이 재발했을 때는 이를 부인했다가 소비자의 불매운동으로 파산의 길을 걸었다.

이번에야말로 소비자의 힘으로 옥시를 퇴출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쉽게 흥분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근성 없는 국민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6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